

# 사랑할수록 달라지는 공동체를 위하여

교육의향

하정호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며칠 전이 3·1절이었다.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니 3·1운동은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이고 헌법이념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이 오십이 되도록 3·1운동의 의의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보진 않았다. 한 팔이 잘리면 다른 팔로 떨어진 태극기를 주워들면서까지 그들이 바랐던 것이 무엇일까? 지금의 우리는 그때의 선조들만큼이나 자주와 독립에 절실한가? 통치와 지배에 저항하려고 광화문으로 구름처럼 몰려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세계인들이 놀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87년 민주항쟁 당시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을까?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린 것처럼,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까지 권좌에서 쫓아낸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성숙하게 될까? ‘자주민’으로서의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자유와 자치를 누리고 있는가? 만일 3·1운동으로 그때의 선조들이 독립국을 이루었다면 그 모습이 지금과는 얼마나 달랐을까?

조선 말기에는 부락마다 서너 개 이상의 계나 두레 같은 조직이 있었다고 한다. 두레가 강한 곳에서는 양반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 개인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세금을 걷고 부역을 시켰던 만큼 일제에 대한 저항도 마을 단위로 일어났다. 그래서 일제는 마을 단위의 구장을 빼고 면장, 읍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만드는 식으로 행정구역을 바꾸어 자치 단위를 깨뜨렸다. 한편으로는 마을을 억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지역에

량을 흡수하기도 했다. 식민지 이후에도 중앙집권국가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에 전쟁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새마을운동은 그나마 있던 마을의 자율 운동마저 관 주도 운동으로 바꾸어 버렸다. 1991년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고 나서는 마을이 행정 단위로 묶여 버렸다. 이제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지만, 우리는 얼마만큼의 자주와 독립을 이루었는가?

노무현 정부 들어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마을에 돈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을 사업은 으레 관의 예산 지원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 마을도 있고 협치 마을, 생태 마을도 있지만 진짜 마을은 없다. 우리가 공모 사업 예산으로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을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가?

지난 2월 전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들과 일본에 가서 K2라는 은둔외톨이 지원단체의 대표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행정의 지원으로 광주에 청년들의 주거독립 시설이 들어서니 광주와 K2가 함께 좋은 일을 모색할 수 있을지 물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업 안 합니다.” 그 대표가 내게 한 말이다. 행정의 관심과 노력은 고마운 일이지만 은둔외톨이의 문제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먼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들의 자조모임 없이 행정의 지원만으로는 은둔외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무원이 그 부모만큼이나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K2가 있는 요코하마에는 은둔외톨이와 그 가족이 여거저거 흩어져 살아가는 마을이 있다. 함께 뒷밭도 가꾸고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 식당도 운영한다. 요코하마 시민들은 음식 재료를 기부하면서 이들을 돕고 있다.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꽤 오래전

에 밑줄 그어가며 감탄을 쏟아내었던 책이다. “노동이 감추어지고 사랑을 상상하지 않는데도 따뜻하고 넉넉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가 있다면 그건 대체 누구의 마을일까요? 제가 걱정되는 건 이렇게 마을을 이야기할 때 ‘다름을 아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들만의 마을’을 꿈꾸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마을과 관계를 강조하지만 그것을 통해 모든 걸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 속엔 나름의 독도 있다. 그 아름다움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불편한 것들은 모두 감춰진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만 나눈다. 누군가가 불편함을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람은 왕따가 되고 마을에서 밀려난다. 왕따를 만들어 단합되는 마을은 마을운동이 아니다. 불편한 타자와도 공존할 수 있을 때에만 마을은 마을운동이 될 수 있다.” 밑줄 그은 말이다.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니 함께 풀어야 할 문제도 다르다. 그러면 풀어가는 방식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 마을과 공동체들의 모습이 서로를 닮아간다면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한 채 관에서 보여주는 ‘우수 사례’를 흉내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만일 공동체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면 이를 지원하는 관의 역할과 모습도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 서로 사랑할수록 달라지는 공동체, 우리와 다른 이웃을 포용하는 공동체, 그러면서도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어야 하지 않을까? 몇몇 주민들이 모여서 요구안을 만들고 행정이 대신 집행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거버넌스도, 협치도 아닐 뿐더러 자치일 수도 없다. 우리는 ‘자주민’임을 잊지 말자. ‘자주민’이 세우는 마을, 그 마을들이 만드는 ‘독립국’은 왕의 목을 자른 뒤에 그 자리에 다시 다른 자를 앉히는 그런 나라는 아닐 것이다.

## 社說

### 연일 계속되는 산불 특단 대책 강구를

#### 경각심 제고론 한계 상황

최근 건조한 날씨속에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산불 발생이 잇따라 소중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대부분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야산으로 옮겨붙는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일 오후 2시 13분께 순천시 월등면 망용리 산 15번지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해 임야 15번지 일대 2동과 임야 47ha가 태운 뒤 21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순천 대형 산불은 당국이 정확한 화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현재 인근 과수원에서 부산물을 소각하다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4일 오후 1시 50분께 화순군 동면 대포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날려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에서 산불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부분의 산불이 실화, 소각 등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며 “행안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계도 및 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봄철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응하고 있지만 감소되기는 커녕 연례행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도 산불 특별대책기간 연장 말고는 기존 대책과 내용이 동일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 쓰레기 소각 금지와 위반시 처벌에도 불구하고 농촌 주민 등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부산물과 쓰레기를 안전하게 태울 수 있는 공동 소각장을 마련해주거나 지자체 등이 이를 대행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홍보를 통한 경각심 제고에 의존하는 대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광주 장애인 이동권, 이대로 관찮은가

#### 저상버스 예산부족 고장 잦아

광주시의 저상버스 도입이 지지부진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 저상버스는 노약자나 장애인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인권도시’를 지향한다면서 정작 지역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커녕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시간만 연장해 보겠다는 광주시의 안일한 생각이 안타깝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운행되는 전체 시내버스 999대 중 저상버스는 330대로 33%를 차지한다. 더욱이 올해부터 노후화된 시내버스를 대체할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해야 하지만 광주시의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80억 여 원에 불과하다. 대체차버스의 교체를 미루고 예산에 따라 순차적으로 바꿔가겠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지만 ‘돈’ 때문에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장애인의 아픔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부족한 버스만큼 저상버스에 타는 것도 힘겨운 일이다.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 높은 정류장 턱을 넘어야 하

고 휠체어 접근을 막는 장애물을 비켜가야 한다. 버스기사를 비롯한 비장애인의 인식도 장애인에게는 높은 벽이다. 그나마 운 좋게 저상버스가 오더라도 고장 등으로 타지 못한 경우도 많다.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 중 하나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도시’ 조성이다.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에 필수적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한 촘촘한 돌봄 도시는 말의 성찬일 뿐이다.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 채 3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3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뒤 ‘버스타는 걸 꿈도 못 꾸다’는 장애인의 체념도 ‘탁상 행정’이 만든 횡포다. 늦었지만 광주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저상버스 확대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저상버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와 교통시설,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등도 필요하다. 올해 광주시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7조 2318억 원이다. 돈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소외된 광주는 더 이상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서석대



어린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다 우물 속으로 빠지려 할 때 누구든 화들짝 놀라 아이를 구해 주려고 달려간다. 그 아이와 상관없이 부모도 아니며 뉘가를 바라는 마음도 없다. 이게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타인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맹자는 이를 측은지심이라 했다.

맹자는 사단(四端)인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성품으로 봤다. 사단이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4개의 마음씨를 말한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측은지심·惻隱之心),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사양지심·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사비지심·是非之心)’

맹자는 사단지심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길을 제시했다.

그가 말한 유교적 민본주의도 귀기울여볼 만하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신임을 얻어야 천자가 되고 천자의 신임을 얻어야 제후가 되며 제후의 신임을 얻어야 대부가 된다”고 역설했다. 그의 말은 “하늘은 백성이 보는대로 보고 백성이 듣는대로 듣는다”로 요약된다. 2500년 전 이렇게 귀에 속속 박히는 말을 해주는 위인이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고사성어인 관포지교(管鮑之交·우정이 돈독한 친구사

이)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진 관중의 저서 ‘관자(管子)-묵민편’에도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네 가지 버리, 즉 사유(四維)를 제시한다. “예(禮), 의(義), 염(廉), 치(恥) 중 하나가 없으면 나라가 기울고, 둘이 없으면 위태롭게 되며, 셋이 없으면 근간이 뒤집어지고(전복·顛覆), 넷이 없으면 망해 다시 일으킬 수 없다(멸절·滅絕)”고 경고했다.

다산 정약용도 그가 올린 상소문에서 “예의염치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끄러워함이다”고 지적했다. 모름지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이고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강한 나라가 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가치 체계로 무장한 이들을 후안무치(厚顏無恥)하다고 표현한다. ‘낮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거나 국가의 일원이라면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고위관직에 오른 자녀의 학폭문제가 연일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자녀와 함께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파장이 크지 않았을 텐데. 법의 허점을 파고들며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 법기술자의 알팍한 술책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으나 수신제가(修身齊家)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삶을 게을리 했거나 ‘타인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인간은 모름지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박간재 전남취재부장**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 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